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발행처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발행인 : 김 홍 국

편집장 : 남두희, 김윤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우137-044)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3599

제2권 제5호 통권11호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제언

수입개방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육계산업

닭고기는 타육류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수한 동물성 단백질원이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적색육 대신 백색육인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더위에 삼계탕을 먹으면 보신이 된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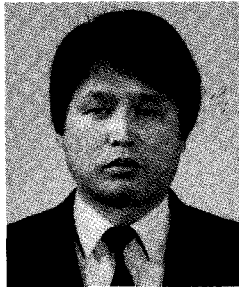
한편, 닭고기는 그 특성상 속성으로 자란 탓으로 고기의 조직이 연약해서 냉동했다가 해동시키면 그 맛이 냉장상태와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해다 먹는 일본과 홍콩이 지적에 있어서 잘만 하면 닭고기의 수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상의 주변환경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키우려는 의지를 갖게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육계의 계열화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4~5년 전만해도 육계의 계열화 사업이 생소하게 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은 닭고기 수입 개방 원년이었다. 그러나 수입 닭고기 상륙이 순조롭지 못했고 올해도 그럴 전망이다. 이는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 닭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육계산업은 농산물수입 개방화시대를 이겨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계열화사업을 조속히 정착시키되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폐사율과 사료요구율에 있다. 그런데 이들 요소들은 계사시설, 종계, 방역 등에 좌우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시설의 현대화, 종계분야의 투자, 방역관념의 철저한 인식으로 이러한 갈등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부득이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이를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심판해 줄 수 있는 가칭 "육계계열화사업 중재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 정 주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축산사업평가위원회 양계분과위원장)

둘째로 사양 및 경영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자칫 경험이 다소 있는 농가들이 자만심에 빠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자주 본다. 기술에 있어서 자만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이를 위하여 가칭 "양계연수원"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양계농가의 기술교육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육계의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는 두번에 걸친 우유파동을 겪었다. 그 바람에 회사가 하나 망했고 낙농가의 출혈도 심했다. 그러나 원유에 대한 위생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한다.

결국 비싼 수입료를 내고 식품에 있어서 위생이 생명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터득한 것이다. 육계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농가는 후기사료 이용과 함께 휴약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일차 가공업자는 정직한 도체를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도체를 생산함에 있어 무릎관절 대신 정갱이를 절단한 닭고기, 목대신 머리를 자르는 닭고기, 허파가 그대로 붙어있는 닭고기가 버젓이 정상품과 거래된다면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지 모르는 일이다.

넷째로 경영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규모의 확대는 개별경영체의 확대와 단지화에 의한 확대를 병행하되 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재의 조달처와 1차 가공처와의 경제적 거리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규모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지 않고서는 규모확대 노력도 공염불에 불과하고 말 것이다.

이제 농산물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도와 같이 흐르는 개방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할 일은 개방의 파고를 어떻게 잘 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숙제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몇가지 제안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